

위기의 지역 대형사업 어떻게

지자체·지역 정치권 합심 부처 공략 나서야

국회 상임위 배정 늦어져 정부와 조율 차질

또문화수도·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타격 불가피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파동으로 무려 40여일 동안 공전했던 18대 국회의 10일 개원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쟁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다 10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뀐 지역 정치권도 부처 장악력이 약화돼 내년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혁신·기업도시 조성,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등 지역 현안 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 및 현안 위기=이명박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 조정할 채로 기획재정부로 넘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양항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은 올해에 비해 상당 부분 삭감 조정됐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지역 SOC 사업 등도 예산 삭감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신규 사업들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 절감 방

침에 따라 예산 확보가 무산되거나 귀뿔리 예산 반영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지역 현안사업들의 차질도 우려된다. 당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성위원장은 4개월째 공석이며, 이 대통령의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완공도 내년도 예산 반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위기 배경=이명박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이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각 부처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최대한의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된 것은 물론 신규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도 저조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국회의 공전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해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챙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정치권과 공조 등에 소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이한 예산 확보 활

동도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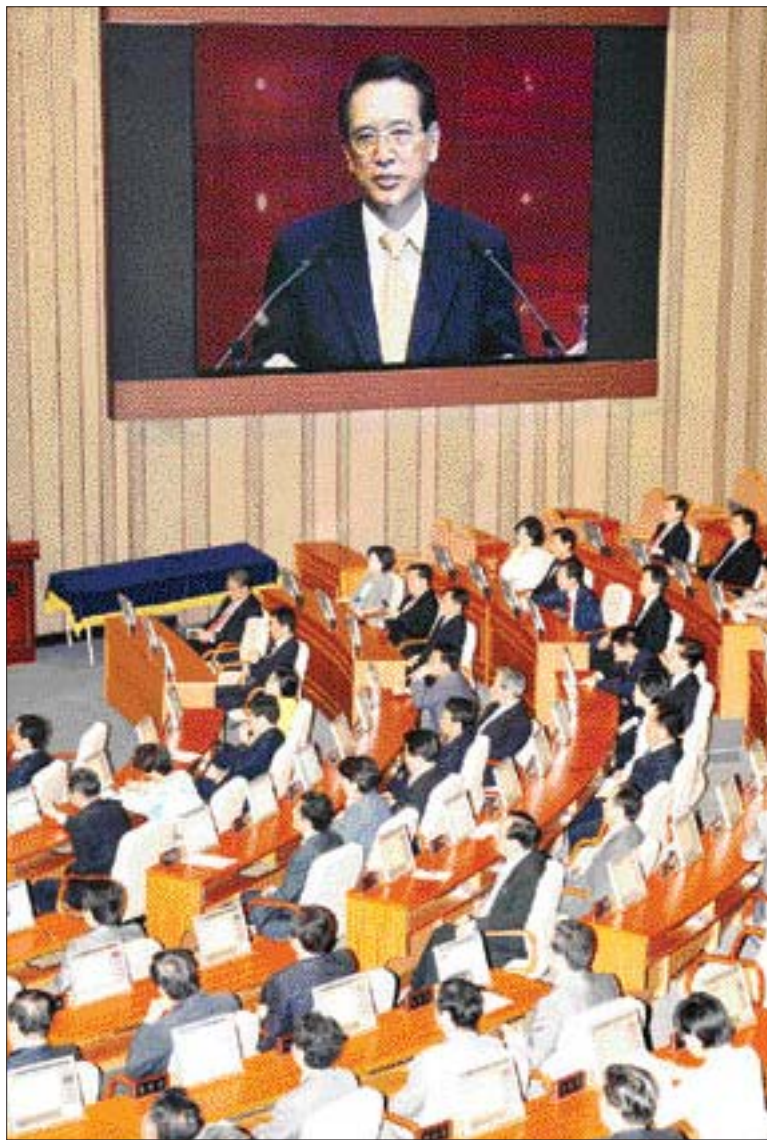
특히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적 상황 변화는 지역 예산 확보는 물론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0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바뀐 지역 정치권의 부처 장악력이 크게 약화된데다 정권 교체 영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취약했던 각 부처의 호남 인맥이 위축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 및 예산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향후 대책=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공조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보다 체계적으로 부처 공략에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협조 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는 등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구를 벗어나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정치협상력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형오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쇠고기 국조’ 곤혹

대통령실까지 대상 직접 포함

책임론 타 부처 확산 가능성

청와대가 국회의 ‘쇠고기 국정조사’ 문제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9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8일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조 대상에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 외교통상부와 함께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직접 포함되자 국정조사 과정에서 입게 될 불가피한 ‘상처’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2차례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등 나뭇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애초의 협상에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물러나고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쇠고기 국정조사로 최근 다소 잠잠해진 ‘촛불집회’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국정조사를 계기로 재차 쇠고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

지난 4월 제1차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무리하게 개방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이 대통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쇠고기 국정조사가 야당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너무 쉽게 야당의 국정조사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쇠고기 국조가 본격 실시되면 쇠고기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청와대 1기 참모진들도 줄줄이 국회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수석비서관이었던 김중수 전 경제수석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은 출석이 불가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도 출석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美, 한국수출용 쇠고기 작업장 29곳 발표

미국 농무부는 9일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령 미만임을 확인하는 품질평가프로그램(QSA)의 시행에 맞춰 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한 도축, 포장, 가공이 허용되는 작업장 29곳의 명단을 일괄 발표했다.

미 농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고시를 통해 ▲타이슨 후레쉬 미츠 ▲워싱턴 비프 ▲네브래스카 비프 ▲내셔널 비프 패킹 컴퍼니 ▲카길 미트 솔루션 등을 공급업체로 지정했다.

이들 작업장에 대한 공식승인일은 7월10일이며, 이날부터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도축과 포장, 가공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QSA의 적용을 받는 30

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가 약 4주 후 처음으로 한국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승인된 작업장 중에는 0-157 대장균 문제와 관련해 시중에 유통되던 530만 파운드의 다진 쇠고기를 가진 리콜한 네브래스카 비프도 포함돼 있다.

미 농무부는 또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QSA를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검역서비스국 규제안’을 별도로 고시했다.

농무부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는 ‘QSA에 따라 30개월령이 인증된 제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이 부착되며, 그렇지 않은 쇠고기는 한국에서 허위 자체가 거부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14일부터 ‘美 쇠고기 국조’

김형오 신임 국회의장은 10일 18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34명이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약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약칭 :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8월20일까지 38일간 쇠고기 협상의 내막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여야는 14일 모두 18명(여야 동수)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 뒤 ▲협상 과정 전반 ▲양국 간 협정문, 추가협정문 및 세부 합의·양해사항 일체 ▲협상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축산농가 등 국내 산업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 등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청와대비서실, 농림수

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으로, 기간은 8월20일까지로 잡았으나 시한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연장토록 했다. 또 조사기간 청문회는 2일, 기관보고는 2일간 각각 실시한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최초 협상의 줄속 타결 배경 ▲협상의 책임소재 ▲추가 협상의 문제점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줄속 타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

내달 20일까지... 김형오 의장 요구서 국회 보고

줄속협상·책임소재 등 최대 쟁점 부상 가능성

면서 청와대와 이 대통령 등 워싱턴의 개입 여부, 협상 경위 및 책임소재를 파헤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야당의 ‘한미정상회담 선물용’ 의혹 등에 적극 방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위의 최종 보고서 채택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보고된 쇠고기 국정조사 요구서는 “정부는 추가협, 추가협

상을 통해 일부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요구사항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국민 불안·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합리적인 국내산업 보호대책을 마련, 통상·검역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기-게

www.kjg.co.kr

무안++장사(장가게) 직항

매주 일,목 7회 편성 ₩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 출발

특별한 고품격! 가격은 다운!

GOLF 4명부터 출발가액 ₩ 899,000-

문의: 228-6070